

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1. 11. 30.

행정재무위원회
전문위원 장영교

1. 제안요지

- 가. 의안번호: 제1693호
- 나. 제 출 자: 성동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1. 11. 16.
- 가. 회부일자: 2021. 11. 18.

2. 제안이유

문화예술시설에 대한 보훈 관련 감면대상자를 추가하고 일부 조문을 현행화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사용료 및 관람료 미반환 원칙에서 반환 원칙으로 조문 정비
(안 제16조 및 제20조)
- 나. 주차료 할인사항 현행화(안 별표 1)
- 다. 구민 및 학생 관람료 감면을 조정(안 별표 2)
 - 1)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면 →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
- 라. 구립 문화예술시설 관람료에 대하여 보훈 관련 법령으로 규정된 7개

분야 감면대상자 추가(안 별표 2)

- 1) 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, 5·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의사상자, 국군포로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: 「국가보훈기본법」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, 별첨

다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1. 10. 7. ~ 10. 2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결과, 신설·강화 규제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제안취지 검토

- 본 개정조례안은 구립 문화예술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 감면대상 중 보훈대상자를 추가하고 일부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

나. 주요 개정내용

- 안 제16조와 제20조에서
 - 사용료 및 관람료의 미반환 원칙에서 반원 원칙으로 조문을 정비하였고

○ 별표에서

- 주차료 할인사항을 현행화하고 관람료 감면대상 등을 정비함

- 2020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 가운데 대관사용 조건의 불공정·불편요인 제거 권고안으로 제시된 사항 중 예약취소 시 미반환은 부당수익으로 ‘미반환’을 원칙으로 정할 경우 반환 의무가 있는 ‘과오납’ 상황발생 시 반환을 못해 대관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사항과
- ‘시설사용 취소 시 선납액을 과오납 절차대로 환불해 주도록 사용취소 환불기준을 명확화’해야 한다는 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 및 관람료 반환 조문 기술방식을 수정하여
- 안 제16조 및 제20조 사용료 및 관람료의 “미반환 원칙”을 “반환 원칙”으로 조문 개정하였고
- 별표1에서 공연장 주차장 할인 변경사항 발생 시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주차장 할인에 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추후 주차할인과 관련한 변동사항 발생 시 즉각적인 반영이 가능토록 변경함
- 별표2를 신설하여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을 명확히하고, 당초 구민 및 학생의 관람료 감면율이 100분의 30 범위였으나, 100분의 50 범위로 확대하여 저소득층 등 타 감면대상자와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였으며

- 감면대상자를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서 규정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인 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, 5·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의사상자, 국군포로로 확대하여 감면율을 규정함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‘공공 문화시설 대관사용 조건의 불공정·불편요인 제거’ 권고안을 수용하여 사용료 및 대관료 반환원칙을 규정하고, 행정안전부의 ‘법령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’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의 책무가 있음에도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자를 일부 누락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감면 거부 등 실무상 혼선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안이라 판단됨

< 관계법규 >

붙임 1

「국가보훈 기본법」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국가보훈대상자”란 희생·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국가보훈관계 법령”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.
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(財源)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